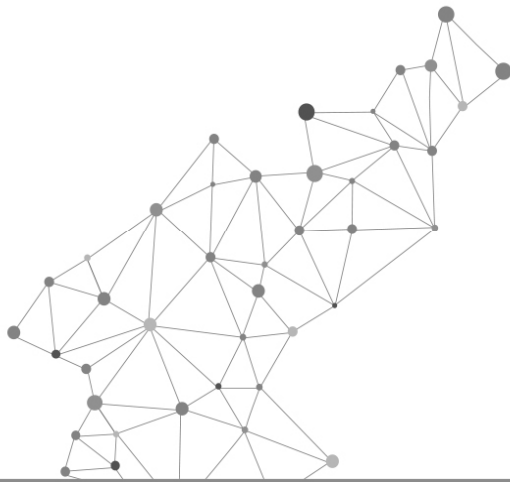


경제자료

2025년 박사학위 수여자 논문 모음



북한경제 연구는 다양한 제약 속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5년에는 참신한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박사학위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본지는 최근 북한경제 및 관련 분야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공유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결실을 널리 알리고자,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총 10편의 논문을 엄선하였으며, 독자들이 거시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주제 1: 북한경제 · 대외경제협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 이기영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장혜원

주제 2: 핵무력 · 억제전략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김준현

북한 핵 위협수준 분석과 맞춤형 재래식 · 핵통합(CNI) 억제방안 | 남완수

북한의 핵억제 전략 최적화 연구, 2012-2024 | 서지영

주제 3: 통치기제 · 정치

북한의 광장정치 : 통치 기획과 주민 실천 | 유남원

북한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에 관한 연구 | 정홍

김정은 시기 성명 · 담화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 최정남

주제 4: 사회 · 젠더 · 역사인식

남북한 고대사 인식 차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 | 김동후

북한 여성의 군사화 연구 | 차수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이기영 | 한국수출입은행 차장 | darim@koreaexim.go.kr

본 연구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과 그 경제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연구는 가입의 제도적 경로를, 두 번째 연구는 가입 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세 번째 연구는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제1논문]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과 북한에 대한 적용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IMF·세계은행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단순한 회원국 지위 획득이 아닌 국제금융기구와 신규 가입국이 장기간 상호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 특히 가입 이전의 대외 채무 정리와 기술 지원, 가입 이후의 프로젝트 지원 및 정책 조율 등 각 단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중장기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2논문]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북한에 대한 함의: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CLMV)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 성립 조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자체가 경제성장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국제금융기

* 본고는 이기영,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구의 기술·금융지원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은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제3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무역, 투자, 원조 그리고 국제금융

본 연구는 북한의 학술 문헌을 분석하여 무역, 투자, 원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 발전과 외화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원조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념적 비판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수단으로 접근하려는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거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었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논의 역시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점차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장혜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 woniwoni28@naver.com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된 북한의 노동시장이 지난 30여 년간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해왔는지 분석한 것이다. 노동시장이 노동계획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기능하는지, 노동시장의 성장 요인은 무엇이며 당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노동시장의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은 무엇인지 등도 본 연구가 던지는 주요 질문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의 ‘형성 단계’를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이전에 탈북한 성인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노동자로 일해본 사람은 2000년 이전 14.3%에서 2016~2020년 42.1%로 약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동자를 고용해본 사용자 역시 10.7%에서 47.4%로 약 4배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는 크게 노동계약제 도입, 노동 이동 및 해고의 증가, 임금의 현금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노동자를 고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노력착취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가 붕괴하여 국민경제의 순환 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 본고는 장혜원,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부문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세수(稅收)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의 과정은 관료 조정의 역할이 위축되는 대신 시장 조정 기제의 역할이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 노동시장의 촉진 요인은 시장화의 진전, 당국의 시장 활용 정책, 개인의 자기결정권 개선 등이며, 제약 요인은 당국의 노동시장 통제, 생산물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이다. 향후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노동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노동정책 강도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부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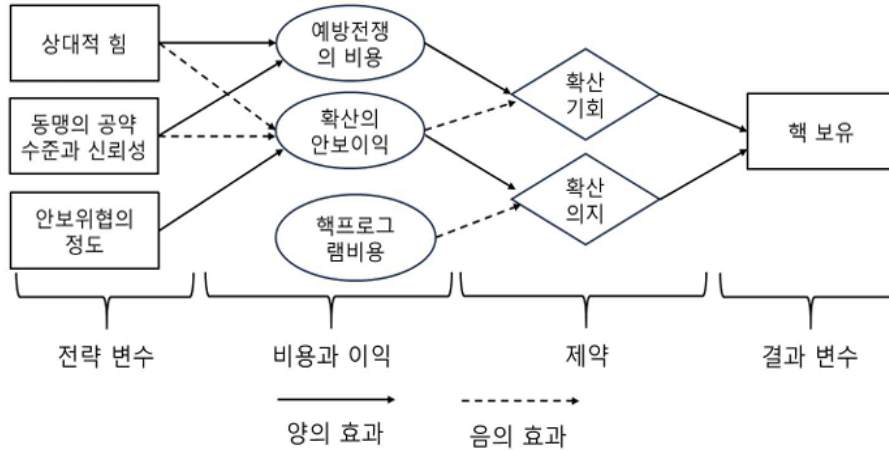
김준현 | 한신대학교 정책학 박사 | dream99@paran.com

핵무기는 그 속성상 적대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된다. 따라서 적대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 공격까지 적극 검토한다. 설령 국가가 핵무기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개발하기 힘든 이유다. 더구나 그 적대국이 세계 최강 미국이라면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저지에 맞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다. 국가는 핵 개발 ‘의지(Willingness)’와 이를 가능케 하는 ‘기회(Opportunity)’의 제약(constraint)을 극복해야 비로소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적대국의 ‘안보위협 정도’와 동맹국의 ‘공약 수준과 신뢰성’ 및 자신들의 ‘상대적 힘’이라는 독립변수가 자신들의 안보이익(의지의 제약)과 적대국의 예방전쟁비용(기회의 제약)이란 개입변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핵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핵확산 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북한의 핵확산은 ‘북-중-미’의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 진행됐다. 북한은 1970년대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해 지난 2017년 11월 최종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약 40년에 걸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은 ‘핵확산 의지와 기회 모색(1970년대~1990년대)’, ‘핵확산 성공과 모호성 전략(2000년대)’, ‘핵무력 국가 완성(2010년대)’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핵확산 의지(willingness)를 갖기 시작했다. 그 후 1990년대에 이르러 자신들의 ‘상대적 힘’과 지정학적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확산 기회(opportunity)를 살려 ‘고강도 헤징’으로 준비했다. 이후 2006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2009년~2012년 ‘전력질주 1단계’, 2013년~2017년 ‘전력질주 2단계’를 거쳐 핵무력을 완성했다. 시기별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 본고는 김준현,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그림 1] 핵확산 전략의 논리



주: 핵무장을 고려하는 국가가 안보 동맹국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동맹공약의 수준과 신뢰성”은 무효이며 그 효과는 없다.
자료: Alexandre Debs and Nuno P. Monteiro, *Nuclear Politics : The Strategic of Prolif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53.

<표 1> 북한 핵무기 개발 역사

	핵확산 ‘의지’와 ‘기회’ 모색	모호성 전략과 핵확산 성공	핵무력 국가 완성
기간	1970년대~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최고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요 특징	· 기회 : 핵확산 안보이익 < 예방전쟁의 비용 · 의지 : 동맹국의 공약수준과 신뢰성 불안		
	핵확산 ‘의지’와 ‘기회’ 모색	전략적 모호성	전력질주
핵확산 전략	기술형 → 고강도	고강도 → 전력질주	전력질주 1·2단계

북한 핵 위협수준 분석과 맞춤형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

남원수 | 청주대학교 안보학 교수 | nwsoo1@cju.ac.kr

본 연구는 위협균형이론과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수준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1>과 <표 2>처럼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고려해 공세적 능력과 공격적 의도를 고·중·저로 구분하여 위협수준을 평가하였으며, 핵에 의한 확장억제방안 4개(일반적·강화된 확장억제, 조건부 핵 대여, 전술핵 재배치)와 3축 체계 중심의 재래식 억제방안 3개(Kill Chain, KAMD, KMPR)를 결합하여 총 5가지 단계(위협이 낮은 I 단계~위협이 높은 V단계)의 통합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위협수준별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

구분		공세적 능력		
		고 위협	중 위협	저 위협
공격적 의도	고 위협	④/전술핵 재배치·NATO식 핵 공유	③/조건부 핵 대여(공유)	②/강화된 확장억제
		③/거부적 억제(Kill Chain)	③/거부적 억제(Kill Chain)	③/거부적 억제(Kill Chain)
	중 위협	③/조건부 핵 대여(공유)	②/강화된 확장억제	①/일반적 확장억제
		③/거부적 억제(Kill Chain)	③/거부적 억제(Kill Chain)	②/거부적 억제(KAMD)
	저 위협	②/강화된 확장억제	①/일반적 확장억제	①/일반적 확장억제
		③/거부적 억제(Kill Chain)	②/거부적 억제(KAMD)	①/응징적 억제(KMPR)

주: ○: 핵 확장억제 수준, □: 재래식 억제수준

* 본고는 남원수, 「북한 핵 위협수준 분석과 맞춤형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표 2〉 위협수준 판단기준

구분	정량적 요소(핵탄두 수, 핵 태세)			정성적 요소
	고	중	저	
공세적 능력 (핵탄두 수)	200~300발	100~199발	0~99발	핵 소형화, ICBM 재진입, MIRV, 극초음속 기술, SLBM(핵잠수함) 등 12개
공격적 의도 (핵 태세)	비대칭확전태세	확증보복/비대칭확전태세 혼합형(하이브리드형)	확증보복태세	정치적, 군사적 의도 등 20개

연구 결과, 북한의 ‘공세적 능력’은 핵탄두 보유량(75~119개, 100개 전후)이라는 정량적 기준으로는 ‘저~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성적 요소로서 위협증가요인(5개)과 위협완화요인(7개)이 유사하고, 핵무기 소형화 및 ICBM 재진입 등 관련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고려해 종합 위협수준을 ‘중’으로 평가하였다. ‘공격적 의도’는 핵 태세가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태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태세임을 고려해 정량적으로 ‘중’으로 평가했다. 정성적 요소 역시 위협증가요인(11개)과 위협완화요인(9개)이 대동소이하여 종합 위협수준을 ‘중’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세적 능력과 공격적 의도가 모두 ‘중’인 현재의 북한 핵 위협수준에 대한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으로는 한반도에 미 핵전력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강화된 확장억제’와 킬체인(Kill Chain)의 ‘거부적 억제’가 중심이 되는 ‘Ⅲ단계 수준의 억제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북한의 핵 위협수준별 맞춤형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이 한·미 양국에 전략적 공간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정책적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억제방안이 북한의 모든 핵 위협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Silver Bullet)은 아니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 연구의 억제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SCM, EDSCG, NCG 등 한·미 협의체별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북한 핵 억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억제 전략 최적화 연구, 2012-2024*

서지영 | KBS 기자/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 sjy@kbs.co.kr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핵전략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제한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적·질적 고도화를 거듭해왔다. 본 연구는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이 대외 환경에 따라 핵억제력의 3대 구성요소인 3C(능력·의사전달·신뢰성)를 확보해온 과정을 ‘핵억제 전략 최적화(Nuclear Deterrence Optimization)’ 개념으로 규명했다.

‘핵억제 최적화’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격능력(2차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체제 생존과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복합적 과정을 의미한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현재를 ‘이익 영역’으로 인식할 때는 위험회피적 성향을, ‘손실 영역’으로 인식할 때는 위험감수적 성향을 보인다.

북한은 시기별로 핵억제력 발전 수준과 대외 환경(하노이 회담 결렬,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준거점을 재설정하며 손실과 이익 영역을 교차 인식해 왔다. 시기별로 4단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2012-2017)는 ‘위험감수적 핵무기 개발 전략’ 시기로, 북한은 초기 핵억제력 확보를 준거점으로 설정하고 연이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기본적 핵능력(Capability) 구축에 주력했다. 두 번째 시기(2018-2019)는 ‘위험회피적 전략국가 인정 전략’ 시기로, 북한은 의사전달(Communication)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으로 전략국가로서의 인정과 제재 해제를 시도했다. 세 번째 시기(2020-2022.9)는 ‘위험감수적

* 본고는 서지영, 「북한의 핵억제 전략 최적화 연구, 2012-2024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반격능력 확보 전략' 시기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실질적 핵억제력 확보를 새로운 준거점으로 설정하며 전술핵 개발과 다층적 억제태세 구축을 통해 능력(Capability)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2022.9-2024)는 '위험회피적 핵보유국 인정 전략' 시기로,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신냉전 구도의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북한의 핵전략이 무분별한 도발이나 비합리적 행동이 아닌, 전망이론적 준거점 변화에 기초한 철저한 '핵억제 최적화 계산'의 결과물임을 증명했다. 북한은 능력 구축 → 의사전달 강화 → 능력 고도화 → 신뢰성 확보의 단계를 밟아오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노이 노딜 과정을 겪으며 '선 폐기 후 보상' 모델(리비아 모델)과 문서상 안전보장의 취약성을 절감했다.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이 인지하는 준거점과 이익/손실 영역의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단선적 비핵화 요구를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정교하고 다층적인 맞춤형 억제·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북한의 핵억제 최적화 전략 4단계 핵심 요약

단계(시기)	상황 인식	핵심 목표	3C 전략
1단계	위기(손실 영역)	미 본토 타격 능력 확보	위험 감수
(2012-2017)	대미 핵억제력 부족	비례억제력 확보	ICBM 발사 강행
2단계	안정(이익 영역)	핵보유국 인정 및 제재 해제	의사 전달
(2018-2019)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대미 협상력 과시	풍계리 폐기 남북/북미 회담
3단계	위기(손실 영역)	실질적 보복 능력 완성	위험 감수
(2020-2022.9)	회담 결렬 팬데믹 고립	반격 능력 신뢰성 확보	전술핵 개발 핵무력정책법
4단계	안정(이익 영역)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위험 회피
(2022.9-2024)	신냉전 및 다극화 체제 도래	핵능력 인정 추구	북러 조약/ '적대적 두국가'

북한의 광장정치 : 통치 기획과 주민 실천*

유남원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you.south1@gmail.com

북한의 광장은 열병식, 군중대회, 정치기념행사 등이 개최되는 대표적인 정치 공간이다. 기존 연구는 광장을 국가 권력의 상징이나 체제 선전의 무대로 주로 이해해 왔으나, 국가의 공간 기획과 주민의 공간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매체가 재현하는 일상불란한 광장과 주민의 실제 경험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광장을 국가가 통치 전략에 따라 기획·연출하는 공간이자 주민이 이를 수행·조정·전유하는 실천의 장소로 분석하고, 통치 기획과 주민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정치사회적 공간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조선중앙년감』(1956~2018)에 수록된 1954~2017년 광장 관련 언급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 『로동신문』 열병식 보도 및 시각 자료, 탈북민 23명의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다. 분석틀은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 이론과 어빙 고프먼의 연극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량 분석에서는 정치기념일의 반복 구조와 광장 활용 양상을, 정성 분석에서는 주민의 참여 경험과 감정, 공간 실천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광장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치행사의 반복과 공간 활용이 점차 정례화·밀도화되었으며, 김일성광장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공간 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둘째, 광장은 반복되는 정치기념일과 다양한 시청각 연출 장치, 공간 배치를 통해 주민의 신체와 감각, 감정을 조직하는 통치 장치로 기능하였다. 셋째, 주민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만은 않았다. 공식 행사 참여를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감정적 거리두기와 형식적 수행, 회피 전략, 일상적

* 본고는 유남원, 「북한의 광장정치 : 통치 기획과 주민 실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활용 등을 통해 국가가 부여한 공간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였다. 넷째, 이를 통해 북한의 광장은 국가의 통치 기획과 주민의 실천이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정치사회적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광장을 국가 권력의 상징 공간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연구를 넘어, 통치 기획과 주민 실천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공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 시각 자료, 구술생애사를 결합한 입체적인 혼합 연구를 통해 국가 담론과 주민 경험을 연결하는 방법론을 구축했으며, 북한 사회를 도시 공간과 주민의 공간 경험 수준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치문화와 공공공간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에 관한 연구*

정홍 |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 blackman6@hanmail.net

3대 혈연 세습 사회인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현지도도를 통해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북한 최고지도자는 경제 및 인민 생활 공간의 현지도도에서 기본적으로 순수 유형의 지배 권위를 생산한다. 또 다른 체제 공간인 군 관련 공간과 정치적 상징 공간의 현지도도에서는 각각 전사 유형과 세습 유형의 지배 권위를 도출해 낸다. 나아가 공간이 부여하는 기본 지배 권위에 최고지도자 독자적인 행태 생산이 결합하면서 순수·전사, 순수·세습, 전사·세습 등 다채로운 복합 유형의 지배 권위가 생성되고 재생산된다.

김일성은 항일 혁명 서사와 결합한 순수 유형의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를 현지도도를 통해 구축하였고, 이는 국가 형성과 경제 운영 과정에서 직접적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산업 시설, 농촌, 군부대 방문을 통해 지도자의 전지적 지도력과 인민적 이미지를 생산해 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북한 사회 형성 초기를 일종의 종교 사회로 규명할 수 있다.

김정일은 혁명 전통 계승과 상징화·제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지도도를 통해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지닌 카리스마적 지배 권위가 선대 지도자의 현지도도에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학습되며,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지배 권위 생산이 가능해짐을 보여준다. 아울러 피지배자의 지지와 순응이 발산되어야 성립되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워서 대중을 마주하는 현지도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 본고는 정홍, 「북한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에 관한 연구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현지도도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김정은은 과학기술, 건설, 경공업 중심의 현지도를 통해 정책 성과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강조하며, 지도자의 친근함과 신속한 의사결정 이미지를 부각한다. 이 과정에서 순수·전사, 순수·세습, 전사·세습 등 두 유형이 혼재된 복합 유형의 새로운 카리스마 지배 권위가 형성된다.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에 비해서 카리스마 교육 시기가 짧았던 김정은은 현지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복합 유형 지배 권위를 생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종합적으로, 3대 혈연 세습을 이어온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현지도를 통해 카리스마적 권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면서도, 시대적 조건에 따라 그 표현 방식과 정책 연계 구조를 조정해 왔다. 현지도는 지도자별로 기능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카리스마적 지배를 유지·재생산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정책 집행과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향후 북한 경제를 분석할 때 현지도 동향을 주요 지표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후대 지도자가 선대 지도자의 현지도에 동행하며 카리스마 후계 교육을 받는 사례는 북한의 3대 혈연 세습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획되고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김정은의 현지도에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김주애의 동향은 향후 북한의 후계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은 시기 성명·담화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정님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cjnim001@ewha.ac.kr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거치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꾸어 왔다. 김정은 시기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대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2023년에 발표된 823건의 성명과 담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난다. 본 연구는 성명·담화의 발표 실태와 주요 특징,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과정 등 대내외 정세를 고려해 시기를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2012~2017년을 전반기, 2018~2023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점을 전후로 시기가 구분된 것으로, 핵 능력 고도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분석을 위해 발표 주체(발표 기관별 현황), 발표 요인(국가별 요인), 중심 메시지, 서술 방식 등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 시기 전반기에는 정권기관·대남기구 중심의 기관 명의 발표가 많았고, 한국 요인에 의해 발신되는 빈도가 높았다. 중심 메시지도 남북관계 및 통일 지향성 메시지, 한국 내 정치 상황 비난, 민간단체의 반정부 투쟁 촉구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서술 방식도 한국을 괴뢰, 패당, 역적 등으로 부르고 미국을 미제, 승냥이로 비하하는 등 욕설과 비난을 많이 사용했다.

반면 김정은 시기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흔했던 기관 명의 발표가 대부분 사라지고, 김여정 등 개인 명의 발표가 많았다. 발표 요인도 한국보다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 요인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심 메시지도 유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 보장을

* 본고는 최정님, 「김정은 시기 성명·담화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내세우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위주였다. 서술 방식도 ‘대적 욕설 사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욕설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성명과 담화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외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한국 중심에서 국제사회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북한 당국은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성명과 담화를 전략적으로 운용하였다. 핵 개발 시기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 지향성을 내세우다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을 국제사회로 전환한 것이다.

둘째, 공식 정책의 변화를 성명과 담화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왔다.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선언과 ‘통일, 화해, 동족’ 용어 폐지 지시는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성명과 담화를 분석해 보면 이미 2019년경부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결별을 내부적으로 정한 이후, 2020년부터 이를 대외 메시지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성명과 담화에서 대남기구 명칭 사용은 2020년부터 전면 중단되었으며, 한국 관련 발신 건수도 전반기에 비해 급감했다.

셋째, 성명과 담화의 유형이 변하면서 격을 결정하는 요인도 달라졌다. 2018년 이전에는 어느 기관이 발표했는지, 성명인지 담화인지 여부에 따라 중요도가 달랐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개인 명의 발표가 증가하면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개인 명의 중심의 성명과 담화 유형의 변화는 북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넷째, 이른바 ‘백두혈통’이 대외 스피커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는 김정은 시기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 특징이다.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최고 지도자’ 개인 명의의 발표가 전혀 없었다. 반면 김정은 시기에는 ‘백두혈통’이 성명과 담화 발표의 전면에 등장하여 직접 대외 스피커 역할을 한다. 전반기에는 김정은이 개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후반기에는 김여정이 개인 명의 담화를 37건 발표하였다. 이는 대내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풀이된다 볼 수 있다.

다섯째, 표현의 정제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면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이다. 성명과 담화의 표현을 정제하고 세련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는 욕설과 비하 호칭, 속담과 비유법이 빈번했지만 후반기에는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표현을 순화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였다는 판단하에, 성명과 담화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고대사 인식 차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

김동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기관 | aniiron@korea.kr

남북한 학계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역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이다. 북한 역사학계가 유물사관, 주체사관, 민족주의 사관 등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끊임없이 재단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이 분명 타당하지만, 모든 역사적 견해 차이를 북한의 편향된 역사관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사학의 어떤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왜곡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막연하게 모든 원인을 특정 사관으로 몰아가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고대사 연구가 과연 민족주의적 요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남북한 고대사 인식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A계열), 영토(B계열), 중심지(C계열), 민족 문화(D계열), 대외 관계(E계열) 등 민족주의 주제 중 남북한 고대사 인식에 대한 대표적인 텍스트를 상호 비교하여 75개의 샘플을 추출해냈다.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수는 ‘북한식 민족주의’로, 종속변수는 북한학계의 고대사 연구 결과가 되며, 최고 지도자의 교시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거의 타당성(정적 비교분석)과 주장의 일관성(동적 비교분석)이라는 판단 기준에 입각하여 고대사 인식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고대사 연구가 민족주의라는 정치 사조에 의해서 확실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례(I 그룹)는 전체 조사 대상 중 18개인 24.0%에 불과하였으며, 민족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II 그룹)을 포함하더라도 42.7%로 과반에 미치지

* 본고는 김동후, 「남북한 고대사 인식 차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 : 북한의 민족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표 1〉 분야별 ‘북한식 민족주의’ 영향도 분석

(개, %)

구 분	조사대상	소계		
		(A+B)	I 그룹(A)	II 그룹(B)
A계열	14(100)	9(64.3)	3(21.4)	6(42.9)
B계열	30(100)	16(53.3)	11(36.7)	5(16.7)
C계열	15(100)	5(33.3)	2(13.3)	3(20.0)
D계열	9(100)	1(11.1)	1(11.1)	0(0)
E계열	7(100)	1(14.3)	1(14.3)	0(0)
계	75(100)	32(42.7)	18(24.0)	14(18.7)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의 영향 범위는 남북한 간 인식 격차를 보이는 민족주의 주제를 100으로 잡았을 때 24~43 수준이므로, 북한식 민족주의 영향에 대한 과도한 편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비민족주의 요소로 인해 남북한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비민족주의 요소는 북한학계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하여 △역사 연구를 위한 초기 조건과 계승성,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높은 접근성, △문헌 해석의 방법론적 차이, △중요 역사적 사실 발견에 따른 파생적 효과, △학문적 성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학계의 고대사 연구에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에 따라 남한학계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학문 연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에 따라 분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존, △수용, △관심과 유보, △토론, △거부라는 다섯 가지 대응 원칙을 개별·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도에 대한 우월의식이 북한의 다양한 지적 생산물에 대한 평가로 확산(spillover)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여성의 군사화 연구*

차수진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cha.sj@ewha.ac.kr

북한은 1962년 자위적 국방노선을 채택하고,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무장화’를 통해 모든 주민을 유사시 전력(戰力)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교훈 삼아 일상생활 전반에 즉각적인 군사 동원 구조가 자리 잡도록 군사화를 일상화하며 전민무장화를 실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여성 또한 군사적 준비의 대상, 즉 전력화의 주체로 편입시켰고, 여성들은 당국이 주도하는 군사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사력으로 통제받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남녀 모두가 중요한 전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초점으로 맞춘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본 논문에서 북한 체제가 여성을 전력화 대상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동원해 왔는지를 ‘군사화’라는 구조적 틀 안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종료 이후부터 오늘날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쟁 발발의 위기감과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전시체제를 상시화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여성을 포함한 전 주민을 유사시 전력으로 동원하는 군사화 조치를 정당화해 왔다. 상시적인 전시체제 아래에서 북한 당국은 여성의 군사화를 성별화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여성에게 주로 후방 지원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전시체제 논리하에서 여성을 언제나 총을 들고 전력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후방 또한 전방 못지않게 중요한 전력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후방 동원에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전시체제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여성 의무 군 복무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전시에만 여성을 동원하거나, 평시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여군을 운용하였다. 이와 달리 북한은 평시에도

* 본고는 차수진, 「북한 여성의 군사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5를 요약·정리하였다.

전시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직장·생활조직 등 일상 영역 전반에 걸쳐 군사훈련과 교육을 제도화했으며, 여성을 정규군·예비전력·생활동원 전 영역에 걸쳐 동원하였다. 이러한 차별성은 북한의 여성 군사화가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가 내세우는 남녀평등 가치에 따른 군역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북한은 체제 위기 속에서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군사화를 통치 전략으로 활용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

저자는 문헌 분석과 북한민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별 여성 군사화의 운영 구조와 수용 양상의 특징을 도출해 비교 서술하였다.

김일성 시기에 북한은 ‘조국보위’ 이념을 내세워 학교와 조직 생활을 통해 여성의 예비 전력화를 제도화하였다. 이 시기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다수였던 만큼, 당국의 군사화 요구를 비교적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다.

김정일 시기에 들어서면 북한 당국은 선군정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김정숙을 ‘백두산 여장군’으로 부각시켜 여성 군사화의 상징적 모델로 우상화했다. 또한 선군 사상에 발맞추어 여군 복무의 문턱을 낮히고 일상생활 속 여성의 군사 동원까지 함께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위기가 닥치자 여성들은 이념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국가가 내세운 이념과 여성들의 실천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정은 시기에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음에도 재래식 전력으로서 여성의 군사력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에 따라 이전 시기보다 떨어진 군사화 명분을 메우기 위해 사상적 측면에서의 군사화를 강조했다. 또한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시장 의존도가 커졌고, 그 결과 군사훈련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여성들이 동원 요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전시체제를 상시 구축하며 여성을 유사시 총을 드는 전력이자 후방 지원의 주체로 삼는 군사화 운영 구조를 김일성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다만 북한 군사화의 방식과 주민들의 수용 양상은 지도자별 통치 이념, 대내외적 상황, 그리고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체제의 통치 전략과 여성 전력의 실효성을 동시에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